2026·11

SK 주식회사 AX Ackerton Partners

AI 플랫폼 설계/구축

ESG 공시 로드맵 확정: 3대 쟁점과 기업의 당면과제

글 | Ackerton Partners, AI SHE/ESG본부 강은일 팀장



01 · 확정안이 바꾼 판: '준비 과제'에서 '법정 의무'로

02 · 쟁점① 범위: 우리 회사는 대상인가, 어디까지 공시하는가

03 · 쟁점② 시점: '3월 말 공시', ESG 결산이 재무 결산 캘린더로 들어온다

04 · 쟁점③ 책임: 3년 면책은 '유예'가 아니라 '리허설'이다

05 · 기업의 당면과제: FY2027 데이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쌓인다

Executive Summary

확정안이 바꾼 판: '준비 과제'에서 '법정 의무'로

- 거래소 공시 단계가 폐지되면서 ESG 공시는 첫해부터 사업보고서에 담기는 법정공시가 됩니다.
- ESG 데이터의 책임 주체가 ESG 팀에서 대표이사와 CFO 조직으로 확장됩니다.

쟁점① 범위: 우리 회사는 대상인가, 어디까지 공시하는가

- 종속회사를 포함하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가 공시 범위에 들어갑니다.
- '연결 경계'를 확정하는 일이 곧 ESG Data Hub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쟁점② 시점: '3월 말 공시', ESG 결산이 재무 결산 캘린더로 들어온다

-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서 Scope 1·2 배출량은 재무제표와 같은 시점에 확정돼야 합니다.
- 연말에 몰아서 하던 보고서 작업을 월·분기 단위의 결산 프로세스로 바꿔야 합니다.

쟁점③ 책임: 3년 면책은 '유예'가 아니라 '리허설'이다

- 면책 기간에도 고의적 그린워싱은 예외이며, 이후의 안전항은 '합리적 근거'를 입증할 때만 적용됩니다.
- 2030년 인증 의무화를 거꾸로 계산하면, 면책 기간은 증명 가능한 공시 체계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업의 당면과제: FY2027 데이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쌓인다

- 공시 범위 확정과 Gap 진단, ESG 결산 프로세스 PI, AI 기반 ESG Data Hub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 2026년 4분기부터 2031년까지의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담았습니다.

01 확정안이 바꾼 판: '준비 과제'에서 '법정 의무'로

1.1 7월 최종안, 무엇이 확정되었나

2026년 7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1]. 2월 의견수렴안이 공개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최종안은 2월 의견수렴안보다 적용 대상을 넓히고 시행 강도를 높였습니다[2].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차 적용 대상이 연결 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낮아졌습니다. 둘째, 거래소 공시를 거치는 중간 단계 없이 첫해부터 사업보고서에 담기는 법정공시로 시행됩니다. 셋째, 초기 3년 면책과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라는 책임 구조가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표 1]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핵심 내용

항목	최종안 내용
적용 대상	FY2027(2028년 공시)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월안 30조 원에서 하향)
단계적 확대	FY2028 5조 원 이상, 이후 2조 원까지 확대 검토
공시 채널	첫해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거래소 공시 선행 단계 폐지)
공시 범위	기후공시 우선 의무화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종속회사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이 각각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 면제
책임	초기 3년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포괄 면제 (고의적 그린워싱 제외), 이후 추정정보 등에 안전항 적용
제3자 인증	2030년부터 의무화
Scope 3	3년 유예(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공시부터)

출처: 금융위원회(2026.7.8), BKL(2026)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1.2 '법정공시'가 결정적 차이인 이유

그동안 KSSB 기준은 자율 공시의 참고 기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에 담기는 순간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율 보고서와 달리 허위·부실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3년은 면책되지만, 고의적 그린워싱은 예외입니다[1].

이는 작성 주체와 승인 절차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대표이사와 신고업무 담당 이사가 기재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3]. ESG 데이터는 이제 ESG 팀의 '취합물'이 아니라 대표이사와 공시 담당 임원(통상 CFO)이 책임지는 '결산물'이 됩니다. **ESG 공시의 주인이 ESG 팀에서 CFO 조직으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최종안이 바꾼 판의 본질입니다.**

02 쟁점① 범위: 우리 회사는 대상인가, 어디까지 공시하는가

2.1 숫자로 본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가 공시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1]. 1년 만에 대상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준이 2조 원까지 낮아지면 그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표 2] 연도별 공시 일정과 범위

공시 연도	대상 회계연도	적용 기준(연결 자산총액)	공시 범위(종속회사 포함)	주요 이벤트
2028년	FY2027	10조 원 이상 코스피	291개사	첫 법정공시, 초기 3년 면책 시작
2029년	FY2028	5조 원 이상	3,171개사	공시 대상 확대
2030년	FY2029	2조 원까지 확대 검토	미정	제3자 인증 의무화
2031년~	FY2030~	-	-	Scope 3 공시 시작 (1차 대상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2026.7.8), BKL(2026)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2.2 '10% 면제'의 함정

최종안은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각각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에서 면제합니다[2].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첫 번째 난관이 됩니다.

1 면제는 '한 해'뿐입니다

면제는 첫해에만 적용되므로 2년 차에는 모든 종속회사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합니다. 첫해에 빠진 종속회사도 결국 1년 안에 같은 수준의 데이터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2 면제되지 않는 해외법인이 가장 취약합니다

규모가 큰 해외 생산법인은 10% 기준을 넘어 첫해부터 공시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이터 체계가 가장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사업장은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거치며 온실가스 산정 경험을 쌓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해외법인은 산정 기준, 데이터 담당자, 시스템이 법인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면제 판단 자체가 결산 업무입니다

어느 종속회사가 면제 대상인지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매출 비중으로 정해집니다. 재무 결산 데이터를 받아야 공시 범위가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ESG 팀 혼자서는 범위조차 정할 수 없습니다.

2.3 시사점: 조직 경계가 곧 마스터데이터다

연결 경계를 확정하는 일은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ESG Data Hub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사업장–배출원으로 이어지는 조직 마스터데이터가 재무 연결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산정과 집계가 어긋납니다. **ESG Data Hub의 법인 마스터를 ERP의 연결 법인 마스터와 동기화하는 것이 Data Hub 구축의 첫 단추입니다.**

03 쟁점② 시점: '3월 말 공시', ESG 결산이 재무 결산 캘린더로 들어온다

3.1 사업보고서 편입, 공시 시점이 3월 말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3].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말입니다. ESG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간다는 것은 Scope 1·2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영향 정보가 재무제표와 같은 시점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체로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사이에 발간되어 왔습니다. 데이터 취합과 제3자 검증, 보고서 제작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법정공시에서는 이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되고, 그마저도 재무 결산과 회계감사가 몰리는 가장 바쁜 시기와 겹칩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파일 다운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